

<보도일시: 업무보고 사후브리핑 시작 시 별도 공지>

---

#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노동개혁,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 -

---

2023. 1. 9.



고용노동부

# 순 서

I . 추진성과와 평가 .....	1
--------------------	---

II .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.....	2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II . 핵심 추진과제 .....	4
---------------------	---

① 노동개혁의 완수 .....	4
------------------	---

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.....	8
----------------------	---

③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 .....	9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## I. 추진성과와 평가

### 1 주요 정책 성과

✓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 → 법·원칙 확립, 개혁 청사진 마련 등 성과

#### □ 산업현장의 법·원칙 확립

- 대우조선 하청노조, 화물연대 등 불법행위에 법·원칙에 따라 대응
  - 조선업의 경우 근본원인(이중구조) 해소를 위한 구조개선 대책\* 수립
    - \* 하도급 구조 개선, 인력난 해소 등 →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·운영('22.11~)
-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(자율점검, 법령 개정 추진 등)
  - \* '22.12.29~'23.1.31 자율점검 → 점검결과 보고 및 미이행시 과태료 등 부과 예정

※ 역대 정부 대비 現 정부 출범 첫해 근로손실일수 대폭 감소\*

\* 근로손실일수 비교(5.10~12.31, 만일): 現 정부 22.9 / 文 80, 朴 61.4, 李 63.4

#### □ 상생·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개혁 청사진 마련

-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 발표('22.12) → 노동개혁 청사진 마련
- 중대재해의 OECD 수준 감축을 위한 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」 수립

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	: 노사 선택권 + 근로자 건강권 + 노동규범 현대화
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	: 사후통제, 규제·처벌 → 사전예방, 자기규율·엄중책임

#### □ 기업 구인난 해소 지원

- 외국인력 신속입국 등 구인난 대책 수립, 제조·해외건설업 특별 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(90 → 180일) 등 현장 어려움 해소

### 2 개선 필요사항

- 입법안 마련, 개혁과제 논의 확장 등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 필요
- 노동개혁, 중대재해 감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도출에 주력할 시점

## II.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### 1 업무 추진 여건

☑ 산업·인구구조는 변화하는데, 불합리한 관행·낡은 규범은 잔존, 불확실성 증가

#### □ 산업·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에 직면

- 디지털·신기술 일자리가 확대되면서, 고탄소·노동집약산업 등의 축소·쇠퇴는 불가피, 대·중소기업 임금격차도 확대\*

\* 임금격차(300인 미만 / 300인 이상): ('20) 60.9% → ('21) 59.4%

- 인구 감소, 초고령사회 진입('25<sup>e</sup>) 등 노동생산성 저하, 다양한 고용 형태·MZ세대 증가 등으로 직업·근로조건에 대한 인식도 변화



※ 블라인드앱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

#### □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·경직적인 노동규범

- 법 경시 풍조, 노사갈등 시 과도한 정부 의존 등 불합리한 관행 지속
- 노사가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대립  
→ 정부가 노사를 설득하며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할 필요

\* (예) 노조법: [勞]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가압류 청구 제한 요구  
[使] 대체근로 금지 완화, 사업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방어권 강화 요구

- '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큰 변화없이 70년간 유지

#### □ 노동시장 불확실성 증가

- 고물가·고금리·고환율, 불안한 국제정세 등으로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가시화 예상

→ 전년 대비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축소(지난해의 10% 수준) 전망\*

\* '22→'23년 기관 전망(만명): (KDI) 79 → 8 (한은) 82 → 9 (노동研) 83 → 9

## 2 업무 추진 방향

비전

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

목표

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

### 과제 1 노동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.

1. 노사 법치주의 확립
2. 노동규범 현대화
3.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

### 과제 2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.

1.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
2. 상생과 연대의 산업·노동 생태계 조성
3.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

### 과제 3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.

1. 기업 구인난 해소
2. 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
3.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으로 개편
4. 고용상황 대응: 단기 컨틴전시 플랜 + 중장기 체질개선

### III. 핵심 추진과제

#### 1 노동개혁의 완수

##### 1 노사 법치주의 확립

- (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) 노동조합 운영·회계 관련 서류의 비치·보존의무 확행\*을 통한 자율적 통제 강화 및 시행령 개정\*\* 추진
  - \* 자율점검 기간 운영(22.12.29~23.1.31) → 점검결과 보고요구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
  - \*\*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, 공표방법 보완 등
- '노조 회계 공시시스템' 구축 추진(자율공시→2월 회계 투명성 노조법 개정안 발의)
- 사무실 지원실태, 노동단체 지원사업 전수조사\* 및 개편\*\*(~3월)
  - \* '22년 사업수행한 38개 단체 51개 사업 대상 결산 등 철저
  - 문제 있는 사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용결과 불인정 및 환수, 차년도 제재 등
  - \*\* MZ세대,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
- (불법·부당한 관행 개선)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(1.20~) 및 시정조치(2월~) → 불법·부당행위 규율\* 신설 법 개정안 발의(2월)
  - \* 노동조합 가입 등 강요, 타 노조원에 대한 차별적 조치 요구 등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금지
- 경사노위 '노사관계 제도·관행 개선 자문단' 구성, 과제 발굴·논의
  - \* (과제예시) 회계투명성 강화, 노사 현장 불법 근절, 노사 대등성 확보 등
  - (추진일정) 자문단 출범·운영(1월~) → 전문가안 발표(5월) → 국회제출(8월)
- ▲건설현장 불법행위 부처 합동 지도·점검\*, ▲'정년퇴직·장기근속자 자녀 우선·특별채용' 등 불공정한 단체협약 시정조치 등 병행
  - \* 고용부·국토부·공정위·경찰청 합동으로 상·하반기 일제 점검 실시
- (공정채용 문화 확산)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(6월 국회제출) → 실질적 공정성 확보,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, 법 이행력 강화
  - \* 채용강요·부정채용 금지 및 제재 강화, 채용정보 제공 확대 등

□ (5대 불법·부조리 근절)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

유형	추진내용
① 포괄임금 오남용	▶ 역대 최초 기획형 수사감독(1~3월) ▶ '공짜야근' 등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 마련(1분기)
② 임금체불	▶ 취약시기·계층 집중지도 ▶ 상습체불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
③ 부당노동행위	▶ 상시 감독체계 구축 ▶ 수사역량·기법 고도화 등 수사 강화방안 마련
④ 불공정 채용	▶ 분야별 집중점검(상·하반기) ▶ 현장점검, 직권조사 강화방안 마련
⑥ 직장내 괴롭힘	▶ 취약업종(보건, IT 등) 컨설팅 ▶ 소규모사업장 예방교육 강화(6,500개소) ▶ 반복 위반 사업장 신속 제재(즉시 과태료)

## 2 노동규범 현대화

□ (근로시간) 노사 자율적 선택권 확대 등 제도개선안\*(입법안) 마련  
→ 입법예고(2월) 후 상반기 국회 제출

- ▲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: 1주 단위 → 年 단위까지 확대
- ▲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: 연구개발 외 1개월 → 全 업종 3개월
- ▲ '근로시간 저축계좌제' 도입: 연장근로 등을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
- ▲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근로자 건강 보호

○ 포괄임금 등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기획감독(1월) 및 근절대책\* 수립(2월)

- \* ▲ 오남용 방지: 감독 강화,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, 임금명세서 교부 지도 등 ▲ 자율 개선 지원: 컨설팅 사업 확대 개편, 영세기업 인센티브 지원 ▲ 근로시간 기록·관리 지원 등

###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관련 후속조치

■ 1년간(1.1~12.31) 계도기간 부여, 근로시간 컨설팅 등 행·재정적 지원\*

- \* ▲ 1:1 전문가 컨설팅 집중 제공 ▲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업장 자가진단표 배포 등

□ (추가과제)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
○ 파견제도 선진화\*

- \*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현, 파견·도급기준 법제화, 파견대상 확대

○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등 제도화 및 직종·직군 특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하도록 부분 근로자대표\* 도입

- \* 특정 직군·직종 등 해당 근로자 동의 시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확화

○ 노사 대등성 확보를 위한 노조설립·단체교섭·대체근로 등 개편 검토

### 경사노위 연구회 운영(1월~) → 정부안 마련(6월) → 법안제출(~8월)

- \* 온라인플랫폼(경사노위), 2030서포터즈 운영 등 미래세대·국민 목소리를 노동개혁에 반영

### 3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

#### □ 취약분야 집중 지원

- 고위험 중소기업 대상 등 3대 사고 8대 요인\* 집중 점검(1만개소)
  - \* 3대 사고: 추락·끼임·부딪힘(사망사고의 62.8%) / 8대 요인: 추락·비계·지붕·사다리·고소작업대, 끼임·방호장치·LOTO(Lock Out, Tag Out), 부딪힘·혼재작업·충돌방지장치 등
- 8대 요인 중심 스마트 안전장비(인공지능 인체감지 등) 집중 지원(250억원)
- 소규모(50인 미만)·제조업 사업장 위험공정개선 지원(4,820억원)
  - 중소기업 안전보건 컨설팅 확대\* 및 대-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\*\*
    - \* ('22) 3.5천개 → ('23) 1.6만개 / \*\* ('22) 5.3억원 → ('23) 99.1억원
- 일하는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재병원·근로자건강센터·직업병안심센터 등을 활용해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및 예방체계 강화
  - \* 산재병원(10개소), 건강센터(23개소), 트라우마센터(13개소), 직업병안심센터(6개소) 등
-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 시행(7월) 및 산재 신속 처리
  - \* 전속성 폐지에 따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규모 : 173만명  
↳ 現 적용 80만명 + 신규 적용 49만명 + 비전속 44만명

#### □ 위험성 평가\*를 보편적 예방 수단으로 확립

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·이행하는 제도

- 중대재해 예방·재발방지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\* 및 의무화('23년: 300인 이상 → '25년: 5인 이상, 산업안전보건법 개정)
  - \* 고시 등 개정을 통해 평가대상·방법·절차 등 대폭 개선(3월)
- 감독(1.7만개), 컨설팅(2.6만개), 기술지도(20만개), 교육 등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

'23년: 총 1.7만개소 + α	
위험성평가 점검 0.7만개	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적정성 등을 확인·지도하는 '점검'으로 개편
일반감독 1만개+α	고위험 업종·시기, 재발 우려 동종·유사 업종 기획감독(수시)
특별감독	다수(2인 이상 동시 사망) 및 다회(1년간 3회 이상) 사망사고 발생시

- 중대재해 발생시 위험성평가 적정성, 근로자 참여 여부 등 엄정 수사



## □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문화 확산

-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확대 및 위험상황 발생 시 근로자 작업 중지권 활성화(상반기 가이드라인 마련)
- 법령상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의무 명확화(연내), 안전수칙 반복 위반 근로자 제재 절차\* 신설 등 근로자 책임 명확화
  - \*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·확산(상반기)
- 지역별 '안전문화 실천 추진단'(2월), 안전문화 국민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적 안전의식을 확대하고 문화를 확산

## □ 안전보건산업 육성 방안 마련

- 스마트기술 안전장비 개발·보급(신규 250억원)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
  - \* 고용부·과기부 간 「디지털 기반 안전일터 조성」 MOU('22.11) 이행·추진
- 일터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\* 제정 추진 등 「안전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방안」 마련(6월)
  - \* 교육, 기술지도, 인재양성, R&D 지원근거 마련 등

## □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

- 처벌요건 명확화, 제재방식 개선 등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를 위해 「중대재해처벌법」 개선방안 마련
    - \* 전문가 TF운영(1~5월) →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 마련(6월) 후 입법추진
  -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現 산업안전보건 법령 체계 정비(1분기~)
    - \*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편, 근로자 의무 명확화 등
  - 기술·산업변화에 따라 안전보건규칙 단계적 현행화(1월 입법예고)
  - 안전보건규칙을 예방·처벌 규정으로 분류하여 필수 기준은 처벌을 유지하고, 선택·대체 가능 사항은 고시·가이드 등으로 전환(1분기~)
  - 특히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여 재해예방 역량에 집중토록 부적합·불합리한 노후 규정을 신속히 폐지 또는 개선(1월 입법예고)
- \* (예) ①안전난간 기둥을 촘촘히 설치한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의무 예외 인정  
②반도체 공장 등의 비계 설치 기준 등 ③굴착면 기울기 기준 합리화 등

## 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

### 1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

- 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, 정책 권고 등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「상생임금위원회」 설치\*(1월)

\* 임금격차 실태조사·공표 및 정책권고 등

- 직무·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기업 대상 지원방안\* 등 논의

\* ▲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기준 마련(1분기), ▲각종 정부 지원 시 우선 선정

-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확대\* 등 '임금체계 구축 패키지' 신설

\* (건수) '22년 570건 → '23년 1200건, (내용) 개편 논의·착수·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

- 임금·직무 세부정보를 결합한 「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」 구축(12월)

\* 한국형 O\*net 구축·설계 관련 '23년 예산 7억원 반영

### 2 상생과 연대의 산업·노동 생태계 조성

-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·이행 및 정부 패키지 지원  
→ 상생모델 구축(1분기)

- 패키지 지원 모듈화 → 향후 타 업종 확대시 업종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인센티브로 적용(지원방안 지속 보완)

<패키지 지원 모듈화 예시>

인력수급 지원	외국인력 우선 배정, 청년희망공제, 대·중소공동훈련센터 등
임금·복지격차 완화	대·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등
공정거래질서 확립	ESG 가점, 납품단가 연동제 등
산업안전	스마트 안전장비, 원하청 안전협력 사업 등

- 이중구조 실태조사 추진(1분기) 및 타겟 업종 선정\*, 자율확산 기반 조성\*\* →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

\* 모델확산(3분기): 철강 등 타분야 확장

\*\* 원하청 상생연대기금·공동노사훈련 등 자율협력 유도,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

### 3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

-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를 위해 서면계약 의무화,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노무제공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(하반기)
  - 특고·플랫폼종사자를 위한 업종별 자율적 공제회 활성화\*
    - \* 공제모델·지원방안 마련, 법제화도 병행 검토
-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
  - \* 경사노위 내 연구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 적용방안 마련(~6월)
-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(비교대상근로자 범위 확대, 신청기간 연장 등)

▶ 이종구조 개선 대책 마련(노동+공정거래+산업 등 정책 패키지, 1분기)

### 3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

#### 1 기업 구인난 해소

- 업종·지역·기업 맞춤형 취업 지원
  - (업종) 지역을 넘어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「업종별 취업지원허브」 신설(반도체·조선 2개소)
    - 상시 인력난 업종(조선·뿌리 등)에 대해 전담조직 등\*을 통해 밀착 지원
      - \* ▲ 신속취업지원TF: 조선업 6개소(울산·목포 등), 뿌리산업 11개소(인천·수원·부산 등)
      - ▲ 고용센터에 전담자 지정: 서비스업 48개소
  - (지역)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·필요에 따라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에 추가(PLUS)하여 지원할 수 있는 상향식 사업\* 도입('23)
    - \* 예) 조선업 원청의 기술연수원 통한 훈련시, 훈련수당 (중앙사업) 월 20만원 + (PLUS) 월 80만원
  - 지역단위로 산업·고용현황을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시스템\* 구축(1분기)
    - \* 광역·기초단위의 일자리 환경·量·質·미스매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일자리지표 제공

- (기업) 채용·취업애로 해소를 위해 진단·컨설팅·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「기업·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」 시행\*

\* ('22) 시범 15개소 → ('23.上) 1차 확대(각 12개소) → ('23.下) 2차 확대(전국 48개 센터)

## □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신속 양성

- '기업 주도형 혁신훈련', 훈련분야·양성규모 확대(2.8 → 3.6만명)

<훈련분야 확대>



-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첨단산업 공동훈련 지원 강화\*

\*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신설(5개소), K-디지털 플랫폼 확대(20 → 35개소)

-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 고도화\* 및 「인재양성 신속절차\*\*」 신설

\* 분야별 기초실태조사 문항·주기 통일성 있게 정비, 현장 FGI 등 질적분석 강화 등

\*\* (現) 연초 접수 및 연말까지 심사, 차년도 개설 → (改) 연도 중 시급한 훈련과정 신설

- 기계·전자 등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지원 확대(4,648억원)

## □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

- 일반고용허가제(E-9)의 경우 '23년에 역대 최고인 11만명 도입('22년, 8만명), 차질 없는 신속 입국 추진

-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제도 신설 →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\* 등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

\* 출국-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 등

-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 적용\* 및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등 기존의 경직적 총량규제 개선으로 인력활용상 애로 해소

\*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총 고용허용인원 20% 상향 적용(~'23.12.31)

- 일반 고용허가제 인력(E-9) 허용 업종을 확대\*하고, 방문취업동포(H-2)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

\* 폐기물 처리업, 신선·단순가공식품 도매업 등 일부 서비스업

## 2 취업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

### □ (청년) 「재학 → 구직」 단계별 맞춤형 지원, 프로그램의 양과 질 제고

- **고교** 현장직무·역량 기반 직업계고 신기술훈련 강화 및 일학습병행 확대\*  
\* ①첨단산업 아카데미 12개소, ②신기술 유망분야 55개 학과, ③경력개발 고도화 지원 10개소
- **대학** 재학 중 조기개입, 직업훈련·일경험 등 맞춤형 서비스\* 제공  
\* (규모)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중 10개교 시범 실시  
(내용) 빌드업(저학년): 직업포트폴리오 설계 → 점프업(고학년):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수당지원
- 일경험 지원 확대(1 → 2만명, 프로그램 다양화) 및 구직단념청년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, 도전준비금 신설(최대 300만원, 8천명)

### □ (여성) 출산-육아-돌봄의 쉼 과정에서 일·가정 양립을 지원

- 경력단절 예방, 맞돌봄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'모성보호제도\*' 개편  
\* ① 육아휴직: 부모 공동육아 사용시 휴직기간 1 → 1.5년 확대  
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: 대상자녀 연령 확대(만8세 → 12세 이하) 및 사용기간 확대  
③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(경력단절여성DB 기능 개선, 대체인력 취업알선 내실화)
- '성별근로공시제\*' 단계적 도입('23.下, 공공기관),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속 구제 등 성별 근로조건 격차 해소  
\* 고용상 성별현황(채용·임금·임원 비율 등) 공시를 통해 자율적 성별격차 개선 유도

### □ (고령자)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중장년 이·전직 지원강화

- 임금체계 개편과 계속고용 법제화 등 사회적 논의 착수(상반기),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\* 등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강화  
\*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한 사업주 지원(1인당 분기 90만원, 2년)<3천명 → 8.3천명>
-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 확대\* 등 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  
\* 1,000인 미만 기업 자율적 이행지원 신설, 200개소

## □ (장애인)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직접지원 확대

- 대기업·금융업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 상호출자제한, 금산분리 등 자회사 설립 제한 규제 완화 협의\* (금융위, 공정위)

\* (案)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시 지주회사의 상호출자제한(공정거래법) 및 은행·보험회사의 지분·업종소유 제한(은행법·보험법 등)의 예외 허용

- 표준사업장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 상향(0.6→0.8%)

- 고용장려금 단가 상향\* 등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근로지원인, 출퇴근비용\*\* 등 장애인 근로자 직접지원 확대

\* (지원수준, 만원) 男·경증 30→35, 女·경증 45→50, 男·중증 60→70, 女·중증 80→90

\*\* 출퇴근비용지원 지원대상 확대(기초차상위 장애인근로자): ('22) 3,850명 → ('23) 15,440명

## 3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으로 개편

### □ (실업급여 수급자) 반복수급자 단계적 감액 등\* 재취업 기능 강화

- \* ▲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구직급여 감액(3회 10%, 4회 25%, 5회 40%, 6회 이상 50%),  
▲단기 이직자 다수 발생 사업장 보험료를 추가 부과 등(법 개정 추진, 환노위 계류)

- 실업인정 재취업 활동 강화기준 전면 적용(5월), 면접불참 등 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 제재, 부정수급 기획조사·특별점검 강화

### □ (국민취업지원제도) 지자체 협업을 강화, 서비스 대상자를 선제적 발굴·지원하여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

\* 복지대상자 중 취업희망자 적극 발굴 →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
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일부 지급, 일자리 탐색기회 보장(법 개정 추진, 환노위 계류)

\* (현행) 57.7만원 이상 소득발생 시 수당지급 정지 → (개선) 소득수준에 따라 부분 감액 지급

- 구직촉진수당 차등화\*, 조기취업 시 잔여수당의 50% 지급 등 근로의욕 고취

\* (현행) 월 50만원 → (개선) 부양가족에 따라 수당 차등 지급(월 최대 90만원)

### □ (전달체계 고도화) 급여지원에서 취업·채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도약

- 고용-복지 융합 서비스를 강화하는 오프라인「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」(시범 4개소)와 온라인「가칭」고용24」 구축

- 생애단계별 경력설계 지원을 위해 AI기반 잡케어 서비스를 고도화 하고, 훈련정보와 워크넷(고용서비스 포털) 연계서비스 제공

□ (제도 기반 구축) 고용보험 관리체계의 소득기반\* 전환('23.下, 개정안 제출) 및 고용서비스 기본법으로 「직업안정법」 전면 개정\*\* (환노위 계류중)

\* 소득파악체계 기반 조세·사회보험 신고사무 효율화 등 추진

\*\* 신산업 확대에 따른 플랫폼 규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

□ (퇴직연금)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의무화, 연금성 확대, 취약계층 재정·세제지원 등 추진

\* 국회 연금개혁 논의 등과 연계하여 「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」 마련('23.上)

📁 주요 일자리 대책 발표 일정

- (청년) 「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」, 「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진방안」(1월)
- (여성) 「제7차 남녀 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기본계획」(2월)
- (고령자) 「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」(1월)
- (장애인)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」(4월)
- (고용서비스) 「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」(1월)

## 4 고용상황 대응: 단기컨틴전시 플랜 + 중장기체질개선

□ (단기) 노동시장 모니터링 → 경기 불확실성 및 고용둔화 대응

- 범정부 「일자리TF\*」 구축, 고용악화 시 「비상경제회의」와 연계

\* 기재·고용 차관 공동주재: 일자리 과제·대책 발굴 + 일자리 사업 총괄 점검

-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선제적으로 고용둔화를 예방하고, 고용상황 악화시 단계별 대응전략(Contingency Plan) 즉시 가동

1 단계	기존사업 조기집행	2 단계	재직자 고용유지	취약계층 생계안정	재취업 지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려금 신속 집행</li> <li>직접일자리 조기 착수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용유지지원금 확대</li> <li>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구직급여 신속 지원·확대</li> <li>위기지역·업종 지정에 따른 고용·산재보험 납부유예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</li> <li>실업자·취약계층 훈련 확대</li> </ul>

□ (중장기)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「고용정책기본계획」 수립(1월)

\* ①산업·인구구조 전환 미래 일자리 대응체계 구축, ②신성장산업, 사회서비스 등 일자리 블루오션 발굴 지원, ③단기일자리 지원은 축소, 고용서비스·직업훈련 투자는 확대

